

'5·18 북한망언' 지만원, 1심 불복 항소

1심서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100만원 선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씨(7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

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의 넋을 위로하고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 진집을 제작했다"며 "그런데도 지씨는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 북한

과 공모해 북한이 만든 조작된 사진을 이용해 계엄군이 5·18 당시 잔인한 살해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는데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며 "특히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건전한 상식과 경합칙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가 영화 '택시'의 주인공 공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명어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지씨가 명예훼손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범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민생4법 가로막는 국회 안 찍어"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민생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세대 '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파면하라"

연세대, 1학기 수강 잠정 배제했지만 징계 아직

"징계 미루다 6개월 지나면 정년 맞게 돼" 지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아베 규탄 서대문행동' (이하 서대문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 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교수를 즉각 파면을 학교측에 촉구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 류 교수를 징계·파면해야 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서대문행동은 류 교수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강점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왜곡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은 류 교수가 다시는 교단에서 강의할 수 없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연세대는 류 교수의 이름을 올해 1학기 수강편람에서 제외하면서 수업에서는 잠정 배제했지만 징계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대문행동은 "류 교수의 징년이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며 징계가 늦어지면 류 교수가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행동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위해 조직된 연대체로 서대문 지역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뉴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신 ●

군산 비응항서 SUV차량 3m 아래로 추락

17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동 비응항 인근에서 SUV 차량이 항·포구 추락 방지턱을 넘어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A씨(59)와 동승자 B씨(58) 등 2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차량이 항 안쪽에 설치된 계단에 막혀 바다 속으로 추락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마출혈과 정강이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C방 주인 찌른 강도, 피해자·시민에 붙잡혀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PC방 주인에게 금품을 빼앗으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강도 등)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PC방에서 주인 B씨(4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저항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으나 뒤쫓아온 B씨와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서 50·60대 남성 2명 숨져

경기 군포시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17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실내에서 피가 흘러 나온다. 옥상에도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포시 한 다세대주택 골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67)와 사건이 발생한 건물 2층 방 안에 쓰러져 있는 B씨(53)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B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쓰러져 있는 방에서 흉기에 찔린 C씨(66·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는 다세대 주택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다툼하다 50대 지인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말다툼 도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6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5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 아들(21)도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오후 11시55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상가건물에 숨어 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가해자는 몇몇 전 알게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가 무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말다툼을 한 이유와 범행 동기는 계속해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건 싸는 데 쓰라"

정당명 적힌 비닐봉투 배포 적발

전남도선관위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명칭과 정적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주는 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적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만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